

‘광복 100년’, ‘민주·‘공화’적 국가의 비전을 탐색하며

— 민주주의·진보의 공화적 차원, 초국경적 공화의 지향을 중심으로 —

조희연 (20~22대 서울시교육감)

I. 들어가면서: 새로운 위기 앞에서

2006년 박근혜 전 대표의 피습과 2024년 초 이재명 전 대표의 피습을 상기하며 이 글을 시작한다. 나는 이 두 사건을 우리 정치공동체의 최소한의 공동체적 기반이 균열되는 상징적 사건으로 규정한다. 두 피습 모두 ‘비정상적인’ 개인의 일탈로 판명되었지만, 나는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 정치의 모습에서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본다.

돌이켜 보자. 박근혜의 피습에 대해 진보진영은 ‘선거용 자작극’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선거 압승의 소재가 되면서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갔다. 반대로 이재명의 피습에 대해서는 보수진영이 ‘부산홀대론’, 야당대표 ‘권력남용론’ 등에 기대어 비판하고 넘어갔다. 그 사건의 심각성보다 그것이 자기 진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미 ‘내재화된’ 정치적 인식에 의해 모두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간 것이다.

일상 속에서도 우려할 현상이 나타난다. 얼마 전 4년 사권 커플이 파혼했는데 그 사유가 ‘탄핵 찬반’이었다는 보도가 있었다(김도연 외, 2026). 3년 전 한 조사에서는 정치성향이 다른 사람과 식사·술자리가 불편하다는 응답이 40.7%, 정치성향이 다른 사람과 본인 자녀가 결혼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43.6%로 나타났다(홍영림, 2023).

내가 이런 현상에서 심각성을 느끼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적대가 극단화되어 최소한의 공동체적 기반이 균열되고 그것이 대중의 일반적 정서가 되면, 그 공동체의 향방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후백제 시절 신검은 자신의 생존과 권력을 위해 아버지를 유폐시키고 왕위에 올랐지만, 그 결정은 곧 자신과 자신의 세계를 멸망으로 이끄는 선택이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한 나라의 위기가 그 나라 내부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내부의 극단적 상황이 외부 요인과 맞물리고 거기에 우연한 사건이 불쏘시개처럼 끼어들면, 사태는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는다. 해방공간의 한국은 결국 ‘내전’적 상황으로 발전했고,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의 독일은 내부의 정치적 혼란이 세계 정세와 얽히며 20세기 최대 비극인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만약 현 단계에서 한국에 극우 정권이 등장해 일본의 극우 세력과 시너지를 일으키고 중·일 갈등의 우연적 변수와 맞물린다면, 동북아 전체가 전쟁 위기에 빠져들 수도 있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았다. 세월호 유족이 “돈도 많이 받아놓고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멘소리를 하는 택시 기사에게, “그러게 말입니다, 그분들 자식 말고 기사님 자식이 죽었어야 돈도 받고 나라도 조용하고 좋았을 텐데요”라고 진지하게 말해주는 내용이였다. 나는 이 글에 담긴 울분과 연대의 정(情)에 공감하면서도, 나와 입장이 다른 이들을 향한 저주와 조롱에 속이 후련해졌다가 곧 ‘이건 아닌데’ 하고 후회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내가 분노했던 대상을 나도 모르게 닮아간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런 작은 사건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최소한의 기반이 균열되고 있음을 경고한다. 정규호가 “시스템 내부에서 생명력이 소진되는 ‘내파(內破)’”(정규호, 2026)라고 표현한 위기로 발전할 수도 있다. 광복 100년을 전망함에 있어 바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동행이 ‘포용·공존·절제·대화’를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라고 나는 이해한다.

나는 이번 발표에서, 현재의 민주주의진보(이하 민주진보)가 ‘공화(共和)’적 진보, 나아가 ‘국경을 넘는 공화적 진보(트랜스내셔널 진보)’로 새롭게 확장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여기서 진보의 핵심은 ‘평등주의’이며, 70~80년대 이후 진보의 핵심 지향과 원리는 ‘민주주의’였다. 지난 40여 년의 긴 민주화 시기 동안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의 희망을 담는 ‘빈 기표(empty signifier)’였다. 이제 두 번의 탄핵을 거치며 K-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담대하게 ‘광복 100년’의 미래 비전을 천착하는 이 시점에, 나는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진보의 새로운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I. 60~70년대 이후 민주진보의 시기별 변화와 ‘공화적 진보’

지난 40여 년의 민주화시대(나는 이를 ‘장기 민주화 시대’라 부른다)에 한국의 진보는 여러 단계를 거쳐 변화해 왔다. 1970년대 권위주의와 독재에 맞선 진보는 주로 **반독재 자유민주적 진보**였다. 1980년 광주학살 이후 반독재 민주화운동이 고양되며 진보는 더 변혁적·혁명적 지향을 품게 되었다(80년대 ‘사회구성체논쟁’을 연상하면 된다). 1987년 이후 민주화가 제도적으로 진전되며 진보는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사회를 개혁하려는 **민주개혁적 진보**로 확장되었다(시민운동적 진보도 여기에 포괄된다).

이 세 흐름은 서로를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다. 나는 자유민주적 진보, 변혁적 진보, 민주개혁적 진보를 모두 한국 민주주의의 소중한 유산으로 본다.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흐름과 결합할 수 있는 **공화적 진보**의 차원을 새롭게 개척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민주에서 민주-공화로 전환은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화성이 빠진 민주주의의 빈틈을 메우는 작업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정의한다. 나는 우리가 독재와 싸우고 민주개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민주성(性)은 철저하게 천착했지만, 공화성(性)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고민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민주성은 민주투쟁성으로 발휘되었다. 적에 준하는 독재와 그 유산에 대항하는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함으로써 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성취하는 사고가 뿌리내렸다. 그러나 80년대부터의 기나긴 민주화의 여정을 지나온 지금, 나는 ‘적’을 (준)군사적으로 제압한다는 사고만으로는 한 국가와 사회를 온전히 리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만일 보수와 진보, 여야, 좌우가 ‘동일한 차원’에서 대립·각축하는 것만으로는 사회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 광복 100년이 되는 시점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해 헌신해온 사람들과 세력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망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견을 개진하고자 한

다.

공화의 의미: 공동체적 공존

공화(共和)의 의미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학술적 공화주의 정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더 넓은 의미에서 공화를 설정한다. 공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함께 삶”**이라 할 수 있다. 영어로는 togetherness, 한국어로는 ‘공동체적 공존’이다. 급진적으로 확장하면 ‘평등한 공동체적 공존’으로까지 이해할 수 있다.

공화국을 단지 ‘민주 국가’의 다른 말로 이해하면 공화는 최소주의적으로 축소된다. 반대로 민주공화국을 ‘함께 사는 민주 국가’로 해석하면, 공화의 적극적 의미—함께 삶, 평등한 공존—가 드러난다. 종교적 언어로 바꾸면, 기독교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불교 연기론(緣起論)의 “모든 존재는 상호 연결되어 있어 나의 작은 행위가 타인과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각이 곧 공화적 태도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성, 공공선·공동선, 공공적 의지에 대한 적극적 참여, 권리와 함께 가는 공동체적 책무성 같은 덕목이 필수적이다.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권리·정체성·가치·이해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체제다. 그 자유를 전제로 하되, 자유가 단지 개인·집단 이익의 전투적 극대화에 머물지 않도록, 민주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민주적 공동체성으로 확장**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한국처럼 ‘민주적 전투성’이 강하게 발현된 사회에서는, 이 전투성이 자유·권리·이익의 무제한 확대에 그치지 않고 민주적 공동체성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하에서 공화는 **민주적 전투성에 민주적 공동체성의 옷을 입히는 것으로** 가능해진다.

Ⅲ. 해방 이후의 민주화투쟁으로 인한 변화: ‘내전의 정치화’와 ‘정치의 내전화’, 그리고 극우

이재명과 박근혜의 피습을 큰 거시역사적 맥락에서 보자. 해방공간(1945~1948)과 한국전쟁 전후까지 좌우의 진영 모두에서 정치적 암살과 테러가 빈번했다. 우익 계열에서는 송진우(1945)·장덕수(1947)가, 좌익 계열에서는 여운형(1947)이, 중도에서는 김구(1949)가 피살되었다. 특히 여운형과 김구의 암살은 남한에서 중도·통일 노선을 대표하던 지도자들이 제거되었다는 점에서 이후 분단과 냉전체제 고착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좌우 청년단체 간 테러, 지방 유지·노동·농민운동가에 대한 암살도 수백 건 발생해 정치 폭력이 일상화된 시기였다.

해방·전쟁·분단을 거치며 남한 내부에는 더 이상 극단적 적대 폭력이 허용되지 않는 정치·사회적 조건, 즉 극단적인 분단반공체제가 형성되었다. 그 위에서 1950년대 이승만, 1960~70년대 박정희,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해방공간의 ‘살륙(殺戮)적’ 폭력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여전히 막강한 억압적 통치를 지속했다. 이 시기에는 ‘국가폭력’이 일상화되었고 장준하 피살 같은 국가테러도 존재했다. 민(民)에 대한 국가권력의 ‘전쟁정치’(김동춘, 2013)의 시기였다.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독재정권만이었고 그들에 의한 국가폭력만이 존재했다. 그람시의 표현대로 통치가 강권적 힘과 헤게모니적 힘으로 구성된다고 할 때, 이 시기의 통치는 폭력으로 일면화된 보수 극단주의였다.

저항운동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전쟁 이후는 '그라운드 제로'의 상황이었으며, 저항운동은 완전한—강요된—'비폭력'적 조건에서 성장했다. 이에 맞서 반독재 저항운동이 아주 낮은 수준에서부터 대중적 지지를 쌓아 올리며 폭압을 서서히 극복해 갔고, 그 클라이맥스가 1987년 6월 민주항쟁이었다. 80년대에 이르면 보수와 진보가 해방공간과 유사한 '각축' 관계에 접어들었다. 특히 광주항쟁 이후 도덕적·정치적 정당성을 거의 완벽하게 상실한 전두환 정권에 맞서, 저항운동은 화염병 등으로 무장하고 거리에서 국가폭력에 대항했다. 87년 민주항쟁 전야는 국가폭력과 민간저항운동이 대치하는 준(準)내전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내전의 정치화’를 성취한 민주화운동이 ‘정치의 내전화’에 새롭게 직면

민주화운동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준내전 상태로 치닫던 한국 정치를 역류시켜 다시 민주주의의 정치를 복원해 냈다는 점이다. 즉 **‘내전의 정치화’**다. 최루탄과 진압봉에 화염병과 돌로 저항하던 거리, 독재권력의 거수기가 된 제도정치—‘무력 대 무력’의 대치 속에서 군사적 노선이 정치와 저항운동의 주도 원리가 될 정도였던 위기를, 6월 항쟁이 직선제 부활과 선거민주주의의 복원으로 되돌려 정치가 다시 제도 안에서 작동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40년 가까운 민주화 시대를 지나온 지금, 우리는 정반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바로 **‘정치의 내전화’**다. 과거 독재를 옹호했던 보수는 국가폭력의 원죄(광주학살 등)를 가졌기에 민주진보의 도덕적 우위가 굳건히 유지되었고, ‘파죽지세’로 민주개혁투쟁이 전투적으로 진행되어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정권교체가 반복되고 민주진보가 집권세력이 되는 과정에서, 과거 보수에게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민주진보에게도 나타나며 도덕적·정치적 우위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에 저항하면서 보수 내부에서 **자발적 극우**가 성장했다. 민주화된 권력을 ‘좌익권력’·‘빨갱이 권력’으로 ‘허구적’으로 인식하는 극우가 등장하고, 이들이 민주진보의 전투적 정치에 대응하며 전투적 극우정치로 나아가고, 이 둘이 상호작용하며 적대적 진영정치의 기반이 생겨났다.

민주진보가 완전한 소수자·약자였던 시기에는 민주투쟁적 전투성이 민주주의 심화의 동력으로 작용했고 지금도 지배적으로는 그러하다. 그러나 그 그늘에 촉발되어 전투적 극우정치가 출현했고, 그것이 역사적 극우에 자발적 극우의 성격을 더하며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나의 분석이다. **‘내전의 정치화’를 성취한 민주진보가 ‘정치의 내전화’를 막는 데, 헌법 1조가 호명하는 공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정치의 내전화’의 길목에 극우의 등장이 있다

50~70년대까지 극우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폭력적 국가의 ‘동원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극우는 과거의 연속선상에 있으면서도 일부 ‘자발적 대중운동’의 성격을 띠는 점이 다르다.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이 탄핵 위기에 처하자 광화문에서는 매주 수만~수십만 규모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태극기와 성조기(심지어 이스라엘기)를 흔드는 극우집회는 이제 낯설지 않고, 전광훈 목사 그룹이 주도하는 집회는 아예 개신교 예배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한국에서 극우 내지 정치적 보수주의의 핵심 동력으로 **기독교 보수주의**가 자리잡았음을 의미한다. 1970~80년대에는 기독교가 민주화운동의 친구였으나, 지난 30여 년을 지나 기독교 보수주의가 정치적 보수주의를 떠받치는 보루가 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이후 치러진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극우를 자임한 야당 후보가 40%가 넘는 득표를 하고 범여권과 범야권이 5:5로 맞서는 현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다음 대선에서 극우적 성향의 야당이 집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극우 정당의 약진은 독일·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 트럼프 재선, 폴란드·일본·남미·영국에서 이미 전 지구적 현상이 되었다. 다행히 한국 시민들은 윤석열의 '극우적 비상계엄' 시도를 '빛의 혁명'으로 막아내며 민주진보 정부를 다시 세웠다. 그럼에도 안도하기엔 이르다. 오늘의 극우는 '동원된 대중'이 아니라 '자발적 대중운동'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는 묻는다. 우리가 자부해온 K-민주주의는 전 지구적 민주주의 퇴행 속에서 어떤 새로운 대안을 창출할 수 있는가. 극우집권은 결과적 현상일 뿐이며, 더 중요한 것은 그 도래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적 조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다. 만약 독일의 민주주의자들이 1919~1933년 바이마르 시기를 '역사의 다른 경로 탐색'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살아볼 수 있다면 파시즘으로 향하던 길을 막을 수 있었을까—나는 가끔 그런 조심스러운 희망의 상상을 해본다.

극우의 규정

극우에 대한 다양한 규정이 있지만, Cas Mudde의 정의를 원용할 수 있다. 그는 극우의 핵심 이념으로 ① 외국인·이민자·소수자를 배제하는 배타적 민족(토착)주의(Nativism), ② 강한 지도자를 선호하는 권위주의, ③ "순수한 국민 vs 타락한 엘리트"를 구분하는 포퓰리즘을 든다 (Mudde, 2019). 최영준 교수 연구팀은 극우를 '극(권위주의·급진주의·반엘리트주의)'과 '우(토착주의·보수주의·반공주의·사회다원주의)'의 7개 속성에 모두 동의한 집단으로 조작적 정의했다 (최영준, 2025).

결국 극우란 단순한 보수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원주의·권력분립·소수자 권리—를 부정하거나 형해화하면서 배타적 민족주의와 권위주의적 국가관에 기초해 '국가의 재생'을 추구하는 흐름이다. 한국적 맥락에서 극우는 냉전적 반공주의, 권위주의 향수, 선거 민주주의 불신, 음모론적 인식을 결합하며, 민주주의 내부의 경쟁자를 정당한 경쟁자가 아니라 제거되어야 할 '적'으로 규정한다. 극우는 (자유)민주주의의 형식을 이용하지만 그 정신을 거부한다. 현재 한국의 극우는 민주주의 자체를 거부하는 '극단우익'이라기보다 소수자 권리를 부정하는 '급진우익'이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는 여기에 하나를 더 첨가하고 싶다. 민족·인종·종교적 차원에서 외부의 '이방인'과 내부의 소수자에 대한 '**공격적 배타성**'이다. 나는 이것을 극우 특성에서 가장 중시한다.

'극우 시대'는 세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극우적 대중의 출현·확산, ② 극우의 주류화, ③ 극우화된 보수정당의 집권이다. 신진욱 교수는 이를 '극우의 주류화, 주류의 극우화'(신진욱, 2024·2025)라 표현했다. 현재까지 세 경향이 완전히 일체화된 것은 아니다. 대중 수준에서 극우는 여전히 변방에 머물러 있고, 다만 탄핵 반대라는 전투 국면에서 중심부로 떠올랐을 뿐이다. 보수정당 내에서 2025년 극우적 후보로 평가되는 장동혁이 당대표가 되었지만 극우화에 대한 강한 경계심도 존재하며, 극우화된 보수정당의 집권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오히려 '빛의 혁명'으로 민주진보 정부가 수립되었다—여전히 희망이 존재한다.

극우가 자발적 대중운동으로 확장되는 것, 나아가 주류화되고 집권당이 되는 것을 막고 민주

주의의 역동성을 유지하는 '선진적' 민주주의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전과제다. 극우정권의 등장을 '외재적' 시각에서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그 등장의 대중적 잠재력을 응시하고—그 잠재력이 우리에게서도 발원(發源)한다는 점을 시야에 넣으며—그것을 극복하는 새로운 예방적 전략이 필요하다.

IV. '장기 민주화 시대'의 성찰적 재분석

공동체적 공존을 지향하는 공화의 관점에서 '정치의 내전화'를 막으려면 우리는 어떤 다른 사고를 해야 하는가. 나는 민주진보의 인식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환적 사고가 없으면 민주주의의 풍부화가 아니라 오히려 극우시대가 올 수도 있다. 한국의 민주진보가 산업화의 그늘에 저항하며 성장해왔듯, 이제는 **장기 민주화 시대의 그늘에 저항하며 보수 및 극우가 성장**하고 있다. 그 그늘을 성찰적으로 응시하며 보완하는 노력, 곧 기존의 민주투쟁적 이니셔티브에 **공화적 이니셔티브를 배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정치가 '천사 대 악마'의 대결이던 시절

우리 사회는 1987년을 기점으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했다. 그 이전, 특히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의 정치는 거의 전면적인 '선악(善惡)'의 대결구도였다. 많은 학생과 민중은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가 아니면 당장 죽어도 좋다"는 심정으로 독재에 맞섰다. 군부독재 세력은 거의 '절대적 악마'로, 목숨을 걸고 해직·투옥·고문을 감내한 반독재 주체들은 '천사'에 가까운 도덕적 형상으로 인식되었다. 조금 과장하면 그것은 하나의 '도덕적 십자군 전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한 일도 있었다. 민주화운동의 이름으로 자행된 일부 폭력—프락치로 오인한 학생을 집단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1989년 동양공전 설인종 사건, 1997년 한양대 이석 사건 같은—이 거대한 선악 구도 속에서 충분히 문제화되지 못했다. 대중은 그것을 '큰 흐름' 속에서 유보하거나 관용했다. 천사가 저지른 악마적 행위조차 시대의 비극으로 흡수된 것이다.

선악 구도의 해체와 '성공의 위기'

그로부터 30~40년이 흐른 지금,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도덕적 우위는 더 이상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억압받는 야당이나 독재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에는 그 자체로 희생과 헌신이 내재되어 있었으나, 이제 정치인들에게 민주화운동은 '훈장'의 의미가 되었다. 민주진보 세력 역시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되었고, 그 순간부터 '천사'는 더 이상 천사로만 남을 수 없게 되었다.

변화의 핵심은 역설적으로 민주화가 거둔 성과 그 자체에 있다.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은 여덟 차례의 정부 교체를 경험했다. 두 차례의 평화적 정권 교체(two turn-over)만으로도 민주주의는 공고화된 것으로 평가되니, 한국 민주주의는 이미 충분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모든 성공은 새로운 과제를 낳는다. 나는 이를 '실패의 위기'가 아니라 '**성공의 위기**'라 부른다. 권력을 갖는다는 것은 정책을 실현할 힘을 갖는 동시에 관료제적 폐해와 부패의 유혹을

함께 떠난다는 뜻이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오래된 말이 있지만, 집권한 진보 역시 부패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예컨대 ‘조국 사건’을 둘러싸고 많은 민주진보 단체가 내홍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스물여섯 차례에 이르는 부동산 정책에도 주택 가격은 폭등했고 주택 소유 여부가 거대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축으로 자리잡아 특히 20·30세대에게 깊은 좌절을 안겼다. 이 조건 속에서 정치 언어는 점점 ‘내로남불’로 수렴되었다. 내로남불은 단지 수사가 아니라 민주화 이후의 정치 지형이 만들어낸 **구조적 산물**이다. 야당이던 시절 최고 수준의 도덕적 기준으로 ‘적’을 비판하면서도 집권 이후 ‘동지’에게는 훨씬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권력을 상실한 보수는 그 이중 기준을 공격의 명분으로 삼았다.

나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우리는 반대편을 비판할 때는 성악설에, 우리 편을 옹호할 때는 성선설에 기대왔다. 상대의 문제는 본질의 발현으로, 우리 편의 문제는 우연이나 왜곡으로 설명해 왔다. 이 이중 기준의 간극만큼 상대가 ‘내로남불’이라 역공할 공간은 넓어졌다. 문제는 이 반복이 적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한다는 점이다. **적을 향한 공격이 오히려 적을 강화하는 역설**이 성립하고, 적대적 진영정치는 더욱 공고해진다.

민주적 전투성의 탄생과 그 이면

40여 년의 장기 민주화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가장 깊이 각인된 변화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되고 실질적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독재 체제가 국민을 ‘백성’이나 ‘군기 잡힌’ 존재로 만들었다면, 민주화는 개인을 주눅 들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으로 변화시켰다. 12·3 비상계엄 같은 퇴행적 시도에 거리로 나와 전투적으로 저항하는 시민의 모습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말 못 하는 사람은 없는 사회”, 이 말은 더 이상 수사가 아니다. 나는 우리 사회가 **‘민주적 전투성(democratic militancy)’**이 꽃피는 사회로 변화했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민주적 전투성은 ‘일면적 최대주의’의 그늘을 갖게 되었다. **일면적 최대주의**란 개인 혹은 특정 이해집단의 권리·이익·정체성·가치라는 ‘한 요소’를 최대화하려는 경향이다. 정당한 가치와 이익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타 집단·공동체적 고려는 약해지며, 정치갈등의 대립 논리와 결합해 쉽게 증폭된다. 여기에는 두 양상이 있다. 하나는 **일면적 최대이익주의**로,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권리에겐 이익추구형 권리도 포함되기에 시민은 권리 침해에 저항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최대치’로 실현하기 위해서도 전투적 에너지를 동원한다.

다른 하나는 좋은 가치를 최대주의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긴장, 곧 **일면적 가치 최대주의**다.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운동은 인권·평등·정의·다양성 같은 소중한 가치를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는 민주화 시대의 가장 빛나는 성과다. 그러나 올바른 행진에도 그늘은 있다. 이 좋은 가치들이 “가능한 한 최대치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지향 속에서 절대화되고 실천이 경직되며 사회적 대화의 공간이 좁아지는 현상, 일종의 비타협적 근본주의 경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예컨대 아동학대를 방지하려는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이 교사의 훈육권을 범죄화한다는 취지로 수십만 교사가 개정을 요구하고, 아동인권·복지단체는 반대한다—하나의 좋은 가치와 다른 좋은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다.

이런 과잉 가속은 때로 보수적 반동과 극우적 재결집을 자극하는 도덕적 자원으로 작동한다.

일부 비타협적 근본주의가 왜곡된 방식으로 쟁점화되면서 극우의 확산과 자기 정당화의 근거로 활용된다. 오늘날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자발적 대중운동으로서의 극우의 등장은 이런 배경을 갖는다. 따라서 올바른 행진에도 '그들'이 있음을 응시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전략적 실천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때 그 그들은 고스란히 극우 성장의 자양분으로 흡수된다.

V. 햇볕정치와 그 5가지 유형: 포용에 기초한 공존의 정치는 어떻게 가능한가

복합성의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식틀

이처럼 곤혹스러운 복합적 상황에 민주진보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과거처럼 선명한 적을 상징하고 전투적으로 돌진하는 방식만으로는 민주화 이후의 사회를 설명할 수도 이끌 수도 없다. 민주진보는 이제 자기 확신을 성찰로 조정하는 용기, 그리고 전투성을 공화적 방향으로 재구성하는 상상력을 요구받고 있다.

여기서 내가 제안하는 핵심 개념은 '**역지사지(易地思之)형 성찰성**'이다. 이는 반대편의 시선에서 나 자신과 우리 진영의 언어·태도·전략을 다시 비추어보는 능력, 곧 '적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 위에 나는 또 하나의 인식틀, '**3-7 인식틀**'을 제안한다. 정치적 쟁점을 100%의 확신으로 부정하려 하기보다, 70%의 확신으로 싸우되 나머지 30%는 성찰의 공간으로 남겨두자는 것이다. 이 30%는 양보나 투항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일정한 합리성과 진실의 파편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잠정적으로 설정하는 인식의 여지다. "지금은 100%의 확신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70%의 확신으로 싸워야 하는 시대다."

이런 역지사지형 성찰성을 전제하면 극우 성장의 요인도 다르게 보인다. 나는 극우 결집에 **도덕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이 동시에 작동한다고 본다. 도덕적 요인은 앞서 본 '내로남불' 논란, 즉 민주진보의 도덕적 우위가 균열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인지적 요인은 지난 40여 년간 형성된 민주진보의 인식틀이 변화한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생긴 미스매치에서 비롯된다. 세계는 급속히 변했지만 민주진보의 언어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바로 이 틈새를 파고들며 극우는 '토착왜구' 같은 자신들의 서사를 구축했다. 뉴라이트 역사해석은 극우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인지적 근거를 학술논리로 제공한 셈이다. 이렇게 극우는 하나의 '**인지적 공동체**'로 변모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결집을 주로 외재적으로 비판하는 데 머물렀다는 점이다. 극우 결집의 도덕적·인지적 요인이 민주진보의 한계와 내적 문제에 대한 **미러링(mirroring)**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자기객관화 위에서만 우리는 고정된 경계를 허물고 그 경계를 가로지르는 심리적·인식적 다리를 놓을 수 있다.

공화적 정치로서의 햇볕정치

바로 여기에서 민주투쟁적 전략에 더해 공화적 이니셔티브가 필요해진다. 나는 이를 민주투쟁적 이니셔티브와 공화적 이니셔티브를 결합한 **유연한 하이브리드 전략**이라 부르고 싶다.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이 바로 이 결합을 요구한다. 공화적 이니셔티브란 진보가 보수와 대

등하게 경쟁하는 하나의 대립 세력에 머무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며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공동체의 리더'로서의 시선을 회복하는 일이다. 나는 이를 '햇볕정치(sunshine politics)'라 부른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정치적 은유로 삼는다. 적대적 대립 구도를 전제하되 그 대립을 해소하는 방식에서 역발상을 취해, 제압을 넘어 '해동(解凍, unfreezing)'의 정치를 지향한다. 적대의 구조를 단번에 무너뜨리기보다 그 강박함이 형성된 도덕적·인지적 계기를 하나씩 녹여내는 전략이다. 극우를 단지 극단성이 아니라 '정서-운동-정치'의 연쇄'로 포착하고 그 연쇄를 끊는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박명림이 말한 '공화적 평화'(박명림, 2026)의 공간을 국내정치 내에서 확장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이때의 정치는 협의의 정치에 한정되지 않고 제도정치·시민사회·교육 실천을 포함한다.

그럼에도 '햇볕정치'가 추상적이라 느낄 수 있으니, 나는 이를 다섯 가지 실천 유형으로 예시한다.

1. 음지의 의제를 양지로 끌어올리는 햇볕정치
2. 직접민주주의형 햇볕정치
3. '내로남불'에 대응해 일반적 규칙을 정립하는 협치형 햇볕정치
4. 자기희생형 햇볕정치
5. 이른바 'PC 햇볕정치'

앞의 두 가지가 대중의 극단성과 전투성을 포용하는 '포용적 햇볕정치'라면, 뒤의 세 가지는 '성찰적 햇볕정치'로 분류한다. 이는 기존의 원칙과 투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조건 속에서 그것을 보완·확장하는 정치적 상상력이자 실천 방식이다. 예컨대 초당적 지지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과감한 협치를, 젊은 세대의 참정권 요구(송파 사태)에 대해서는 진지한 수용을, '내로남불'이 반복되는 사안에서는 스스로 기득권 일부를 내려놓고 공통 규칙을 만드는 노력을, 민주화세대가 위선처럼 비치는 사안에서는 자기희생의 정신을 되살리는 노무현식 접근을, '탱크데이' 같은 사안에서는 국가 권력의 과도한 개입을 경계하는 '과유불급'의 절제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 투쟁 전략과 햇볕정치적 실천을 사안에 따라 배합하는 **유연한 복합전략**이 필요하다. 6·3 지방선거의 결과야말로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고민을 던진다.

'올바름'의 행진에도 그늘이 있다

노동·여성·성·소수자·장애인 인권, 동물권 등 다양한 인권 개념의 확장은 억압되었던 평등의 요구를 모두가 승복해야 하는 '정치적 올바름'으로 정착시켰고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지금은 이른바 PC의 백래시(backlash)에 직면해 있다. 정치적 올바름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며 상대에 대한 극단적 공격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운동 내부에서 절대화 속 극단적 경향과 상호 비판이 생겨나기도 한다. 또 PC를 주장하는 개인·세력의 삶이 그에 부응하지 못할 때 언제나 '내로남불'·위선의 틈새가 생긴다(386 부모와 신세대 자녀 간 갈등에도 이런 요인이 작용한다). '언더도그마'의 문제도 출현한다. 이 모든 것이 극우의 정치적·사회심리적 자산이 된다. 전진의 그늘에는 언제나 미스매치가 존재한다. 장기 민주화 시대에는 '전진'에 방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미스매치를 해결하면서 전진하는 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VI. '공화적 민주시민교육'의 과제와 방향

민주시민교육에서 공화적 민주시민교육으로

지난 30여 년 한국 교육의 핵심 가치 지향은 '민주시민교육'이었다. 권위주의 시대의 군사문화적 국민 대신, 당당하고 주체적인, 때로 전투적인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목표였다. '권리 시민'이자 권리를 위해 싸우는 '전투적 시민'이 이상형으로 제시되었고, 서울시교육감 재직 당시 "교복 입은 시민"이라는 슬로건도 같은 맥락이었다.

이제 민주화 이후 시대로의 전환에 맞추어 민주시민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공화적 민주시민교육'이라 부를 수 있다. 이는 기존 민주시민교육의 대체가 아니라 확장·심화다. 여전히 비상계엄 같은 권위주의적 퇴행의 위험이 있으므로 기본적인 민주주의 교육은 필수지만, 권위주의적 공동체성이 아닌 민주적 공동체성에 기반한 '공화'까지 함께 교육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르다.

기존의 권리 개념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자유권적 권리' 확장을 지향했다면, 이제는 '관계적 권리'의 차원을 주목해야 한다. 민주화의 그늘로 개인이 새로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자기중심적으로 최대화하려는 노력만 있었지, 그것을 함께 사는 자유와 권리로 확장하지 못했다. 자유·권리를 전적으로 옹호하되, 그것을 타인과 공동체의 차원에서 조율할 수 있는 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공화적 시민의 핵심 덕목은 '역지사지형 성찰성'과 '책무성'이다. 이는 타인의 자리에 나를 놓아보는 자기객관화의 능력으로, 자신의 권리를 치열하게 옹호하면서도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이방인·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한다. 넓게 보면 민주주의에 내포된 평등·상호존중의 가치가 생활화된 시민이 곧 공화적 시민이다. 극우집권시대를 막기 위해 이런 공화적 교육은 학교교육·사회교육·평생교육·시민교육의 전 영역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공화적 교실교육의 3가지 방향

지금은 현재의 적대적 진영정치가 교육에도 전이되어 학교와 교실이 차별과 혐오의 일상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①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초 위에서, ② 독일식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원리를 준수하며, ③ 다양한 견해를 교실이라는 공적 공론장으로 끌어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다. 교실에서 학생은 선거권·정당 활동 등 일정한 정치적 권리를 갖지만, 가르치는 교사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가 크게 제약되어 있다. 나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과 교육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충분히 병행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보이텔스바흐 협약(1976)**의 원리다. 이는 ① 강압적 교화·주입의 금지, ② 현실의 논쟁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논쟁성의 유지', ③ 학생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정치적 행위 능력의 강화'라는 세 원칙을 제시하며, 보수·진보를 떠나 독일 정치교육의 기본 규범이 되었다. 한국도 이를 수용해 특정 입장을 강요하지 않되 현실의 논쟁을 숨기지 않고 다루어야

한다.

셋째, **혐오의 언어를 넘어서는 교육**이다. 현재 혐오·증오, 일베적 언어가 청소년의 언어세계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친구가 실수하면 ‘너 장애인이야’라고 조롱하고, 남자끼리 몸이 닿으면 ‘게이’라며 성소수자 차별의식을 언어로 주고받는” 식이다. 장애인·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납작한 언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10대들의 단톡방에서의 놀이형 극우화’도 심각하다. 그러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약된 상태에서는 이런 현상에 교육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교실에서도 음지를 양지로 끌어와 밈이나 은어가 아니라 공적 공간에서 논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나아가 유튜브 등에 범람하는 혐오·적대 언어를 비판적으로 상대화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확장된 열린 토론이 정착하려면 **교사의 교육권**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적 목적의 교사 연행에 대해 일부 학부모가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교육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한 형태의 예시로, 서울교육청에서 시행한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을 들 수 있다. 첨예한 쟁점에 대해 1단계에서 찬반 중 한 입장에 서서 토론하고, 2단계에서는 정반대 입장에 서서 토론하게 하는 모형이다. 이는 자신의 논리를 더욱 정교화하는 교육적 효과와 함께, 미래 세대가 적대적 진영정치를 넘어서는 인식적 근거를 갖게 하는 시민적 효과가 있다. 지구촌 전체에서 확증편향이 강화되는 현실을 넘어서는,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교육정책으로 ‘수출’할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공화형 민주주의학교로

교육 영역에서도 최대이익주의적 극단성과 ‘좋은 가치’의 최대주의적 실현이 낳는 그늘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는 다양한 이익과 가치가 충돌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공간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권위주의 시절과 달리 민주화 이후에는 반대의 딜레마가 나타난다. 학생 인권을 폭넓게 존중하려는 노력은 당연하지만 일부 학생이 이를 왜곡해 교권을 훼손하고, 학부모를 학교 의사결정의 당당한 참여자로 세우는 변화는 바람직하지만 일부는 사적 이해를 앞세워 현장을 혼란스럽게 한다. 노동조합의 문제도 이런 원리로 볼 수 있다. 70년대에는 노동조합의 모든 권리·이익 확대 노력이 그 자체로 100% 공익적일 수 있었지만, 87년 이후 노조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노동자계급 내부 구성이 분화되면서, 대기업 노조는 자기 이익의 극대화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계급 및 사회의 공동체적 이익과의 균형점을 고민해야 하는 조건에 놓였다. 고용세습의 단체협상 명문화처럼,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못한 20·30세대의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

2024년 상반기에는 ‘빈대 소독을 어느 집단이 해야 하는가’—보건교사인가, 행정실 직원인가, 공무원인가—를 둘러싸고 학교사회에서 일종의 ‘노-노 갈등’이 발생했다. 이는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예화가 아니라, 이런 이익 갈등이 거의 모든 사안에 내재해 표출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학교는 작은 사회이며, 특히 모든 개인과 집단이 민주적 전투성을 지닌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학교와 사회의 접점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학생 기숙사를 짓는데 외부 주택소유자·임대업자가 반대하고, 특수학교나 탈북학생 학교를 혐오시설로 간주해 집값 하락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경우가 그 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동체의 목표에 비추어 각 집단의 이해를 존중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가는 **열린 공화적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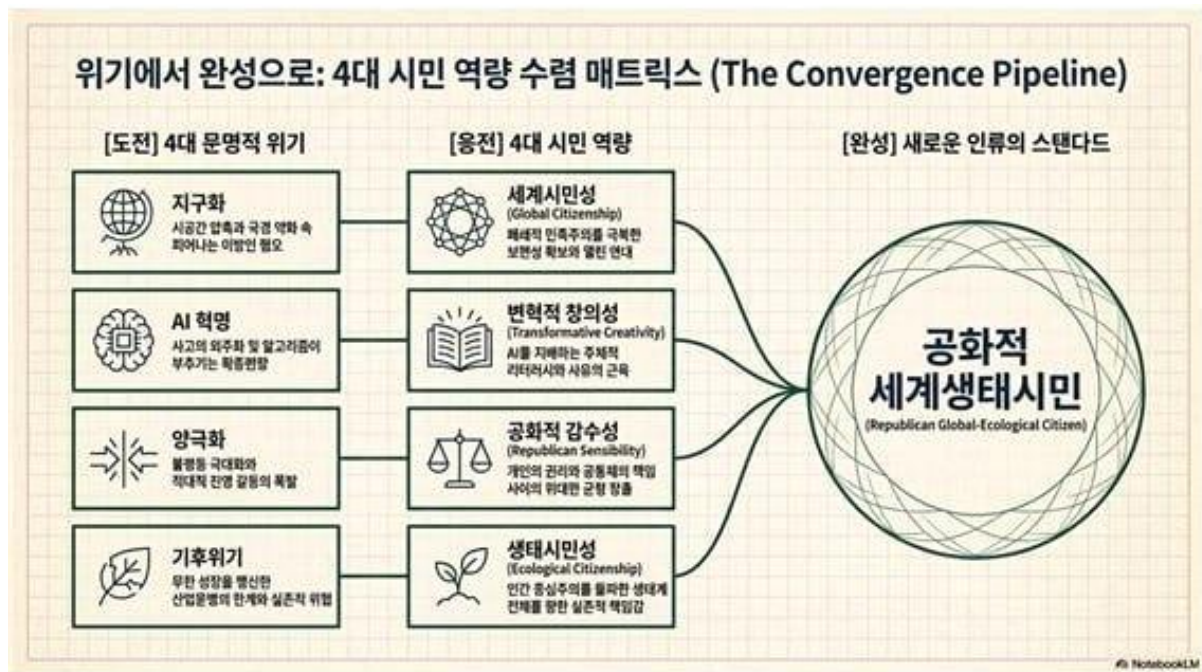
지난 10~20년의 교육민주화·교육혁신이 '권위주의적 학교(문화)를 민주적 학교로' 만들어왔다면, 이제는 민주적 학교를 기반으로 **공화형 민주주의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교사들은 고립되고 각자도생하며, 책임은 사라지고 '위험은 개인에게 전가되는 조직적 무책임성'(김영식, 2026)이 나타난다. 학교는 점점 공동체성을 잃고 대입을 향한 속도전의 공간, 곧 '입시가속체제'(정용주, 2026)가 되어간다. 이것은 민주화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위기'다. 과제는 과거 권위주의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이 당당한 전투성이 공화적 기조 위에서 공동체적 최소 공간을 유지하며 발휘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민주성과 공화성을 훈육이 아니라 **문화·관계로 체험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도 민주적 주체성과 전투성을 담지한 존재가 되었기에, 공화적 덕성을 강요로만 훈육하면 주체성이 훼손된다고 느껴 큰 효과를 갖지 못한다. 민주성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 앞에 당당하고 그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역량이라면, 공화성은 그 자유와 권리를 넘어서 공동체적 협력을 할 수 있는 역량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로부터의 퇴행을 막는 데 그치지 말고, 시민적 덕성과 공화적 감수성을 회복해 학교를 공화적 민주주의학교로 전환해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 교육이 품어야 할 새로운 사명이다.

VII. 광복 100년의 미래시민·학생상

나는 교사·학부모 연수에서 "현재 우리 사회와 지구촌에 제기되는 '미래도전'이 무엇인가"를 묻곤 했다. 국내적으로는 저출산·지방소멸·입시지옥을 떠올리겠지만, 지구 공통의 도전으로 나는 **네 가지**를 든다. ① 세계화가 한 단계 높아지며 나타나는 지구촌화, ②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배경으로 한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대립의 극단화, ③ 삶의 양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AI기술혁명, ④ 근대산업문명의 위기를 상징하는 기후위기다.

이에 응전해 지난 10~20년의 화두였던 민주시민교육의 학생상을 한 단계 혁신해야 한다. 나는 그 미래 학생상을 '**공화적 세계생태시민**', 그리고 AI시대를 살아가는 '**변혁적 창의성(transformative creativity)**'을 갖춘 시민으로 제시한다.



- **지구촌화 → 세계시민형 민주시민.** 국경이 무너지고 장소성이 열린 세계에서, 편협한 민족주의를 넘어 열린 민족주의, 나아가 코스모폴리탄적 마인드와 트랜스내셔널 상상력을 갖는 세계시민·지구시민이 되어야 한다.
- **양극화·극단화 → 공화형 민주시민.** 양극화의 고통에서 비롯된 불만과 긴장은 이주민·난민·이방인을 향한 혐오와 적대로 표출된다. 미국 의사당 점거처럼 의회민주주의 자체가 망가지는 위기 앞에서, 최소한의 공존 역량, 곧 '공화적 감수성'을 함양해야 한다.
- **AI기술혁명 → AI기반 기술역량.** 미래세대는 AI를 이해·활용할 뿐 아니라 고도의 개발 역량까지 갖추어야 하며, 그 핵심 마인드가 '변혁적 창의성'이다. 동시에 AI가 동반하는 그늘을 비판적으로 대하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공화적 마인드도 필요하다. AI가 살상무기와 연계되면 과거의 전쟁을 뛰어넘는 재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기후위기 → 생태시민형 민주시민.** 더 많은 생산·유통·소비를 미덕으로 했던 근대산업 문명이 자기파괴적 극단에 이른 지금, 지구 자체를 지키며 생활하고 소비하는 새로운 생태적 인간이 필요하다.

광복 100년을 준비하는 국민동행의 과정은 교육에서 이런 미래역량을 갖는 신인류를 만드는 노력과 함께 가야 한다.

VIII. 광복 100년을 향한 2가지 작은 제안: '사회적 상속'과 'ODA 증액'

광복 100년을 향한 국민동행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동행의 캠페인이 있으면 좋겠다. 그 점에서 두 가지 주제를 제안한다.

사회적 상속

2013년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1·2·9호가 위헌이라 판시했고, 이에 따라 무죄와 국가배상·보

상이 이루어졌다. 그러자 긴급조치 9호 세대가 뜻을 모아, 30여 년 만에 받은 국가배상금 일부로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기금'을 만들었다(2013년 12월, 아름다운재단 기탁; 나도 참여했다). 규모는 작았지만 이 기금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지원했고, 마지막 사업은 미얀마 군부에 맞서는 민주화 활동가를 위한 온라인 교육 교재 제작이었다. 30여 년 전 독일·일본 등 해외의 지원을 받았던 이들이 그 도움을 국경을 넘어 되돌려준, 일종의 **사회적 상속**이자 초국경적 협력의 사례다.

최근에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586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 상속 운동이 논의되고 있다(조희연, 2022). 1989년 손봉호 교수 등이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벌인 '유산 안 남기기 캠페인'이 한 선례다. '사회적 상속'은 혈연 자녀에게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자산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으로, 재산의 1%-2%-5%-10% 등 다양할 수 있다(10%라면 '십일조형 사회적 상속'이 된다). 이는 **자기희생형 햇볕정치**의 한 모습이다. 물론 이것이 구조적 개혁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우리 사회는 이미 '상속자들의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고, 우석훈이 말한 '알바공화국'(우석훈, 2024)으로 구조 자체를 변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민간 차원의 자발적 기부운동도 상속공화국을 넘어서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다.

ODA 증액 운동

두 번째는 국제주의적 정신을 담은 캠페인, 곧 **공적개발원조(ODA) 증액운동**과 그것의 피원조국 친화적 정책 요구 운동이다. 한국의 ODA 예산은 최근 빠르게 증가해 2021년 3조 4천억 원에서 2025년 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약 두 배 가까이 확대되었고, GNI 대비 약 0.21%에 이르렀다. 이는 한국이 책임 있는 공여국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 대한민국 ODA 예산의 증가 추이

연도	ODA 예산(조 원)	전년 대비 증가율	국가총지출 대비	GNI 대비
2021	3.44	—	0.62%	0.16%
2022	4.16	20.9%	0.68%	0.17%
2023	4.78	14.9%	0.75%	0.18%
2024	6.26	31.0%	0.95%	약 0.20%
2025	6.50	3.8%	0.97%	약 0.21%

자료: 기획재정부·외교부·OECD DAC. GNI 대비 비율은 OECD DAC 기준.

그러나 한국의 ODA 규모는 GNI의 약 0.2% 수준으로, OECD DAC 평균(약 0.37%)에도 못 미치고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권고해 온 0.7% 목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2024년 ODA 예산 39억 달러로 세계 13위다.

표 2. OECD 주요 공여국의 ODA 규모(GNI 대비)

국가	ODA/GNI(%)	UN 목표(0.7%) 달성
노르웨이	약 1.09	○
룩셈부르크	약 1.00	○
독일	약 0.82	○

국가	ODA/GNI(%)	UN 목표(0.7%) 달성
스웨덴	약 0.79	○
덴마크	약 0.71	○
네덜란드	약 0.66	△
영국	약 0.50	×
프랑스	약 0.48	×
일본	약 0.44	×
OECD DAC 평균	약 0.37	×
대한민국	약 0.20~0.21	×

자료: OECD DAC,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이런 점에서 나는 ODA 예산의 획기적 증액을 촉구한다. 광복 100주년에 세계 최고 수준인 **GNI의 1.1%**(2025년 기준 세계 최고는 노르웨이 1.09%)로 증액하는 담대한 목표를 세우고 캠페인을 전개하면 좋겠다. 보수 쪽 '존경받는 나라 운동'의 ODA 증액운동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떠나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신간회'적 협력 모델도 가능하다. 아울러 ODA의 활용이 공여국 이익이 아니라 완전히 피원조국 친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해야 한다.

글로벌 교육공헌

ODA가 1.1% 수준으로 상향된다면, 이에 발맞추어 한국적이면서 세계에 영감을 주는 국제협력 모델을 만들면 좋겠다. 한국은 '교육입국(教育立國)'의 나라다. 과거에는 학교를 지어주고 교사를 파견하는 아날로그형 교육지원이 일반적이었지만, 디지털·AI 기술혁명 시대에는 학습자 스스로 스마트 기반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충되고 있다.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전기만 연결되면 학습 콘텐츠와 시스템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런 조건을 활용해, 난민촌의 학생들까지 스스로 학습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교육공헌을 대폭 확대하면 좋겠다. 나는 '**스마트 기반 지구촌 의무교육**'을 상상한다. 수학·영어·과학을 넘어 '지구시민윤리' 같은 공통과목을 만들어, 전 세계 아이들이 어디에 살든—난민촌에 있든—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담대한 미래를 한국이 선도하면 좋겠다.

그동안은 '부자 되세요'·'잘 살아보세'가 국가적 목표였다. 이제 그 시대를 뒤로하고,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이라는 더 수준 높은 국가 목표가 필요하다.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한류에 대한 젊은이들의 선망이 이어지려면 그 실체적·도덕적 기반도 함께 확대되어야 한다.

IX. 맺으면서

민주진보의 에너지는 언제나 '전진'에 집중되어 왔다. 개인과 집단이 각개약진하며 더 평등하

고 자유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민주진보의 본령이다. 그러나 그 전진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그늘이 사회 전체에 어떤 부담과 균열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성찰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그 사이 보수와 극우는 바로 그 그늘을 자양분 삼아 성장하고 자신을 재생산해 왔다. 과거 민주진보가 산업화의 그늘에 저항하며 발전해 왔다면, 이제는 **민주화가 남긴 그늘을 직시하고 풀어내야** 한다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내적 한계를 가진 제도다. 국민 각자의 주권적 판단의 총합 위에 서 있는 체제이며, 브렉시트의 선택도 트럼프의 당선도 그러했다. 그런데 이 주권자적 개인은 흔히 '일면적 최대주의'에 따라 자신의 최대이익이나 옳다고 믿는 가치의 전면적 실현을 위해 일면적으로 매진한다. 지난 장기 민주화 시대에 이 전투성이 발현되어 한국 민주주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에 도달했지만, 그 '민주적 전투성'의 그늘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민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원리상 책임질 필요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그 자랑스러운 **민주적 전투성이 민주적 공동체성과 결합되도록**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민주진보가 발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것을 공화적 이니셔티브 혹은 공존의 이니셔티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공화적 시선은 이제 **국경을 넘는 공화적 이니셔티브**로 확장되어야 한다.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에서 '성공'한, 근대로의 두 관문을 성공적으로 돌파한 나라다. 한국의 산업화는 압축적인 산업혁명, 민주화는 압축적인 시민혁명의 성공사다. 전후에 이런 역사를 가진 경우는 싱가포르밖에 없고, 중규모 이상의 단일 민족국가에서는 한국이 예외적이다. 그러나 이 이중의 추격은 서구를 벤치마킹하며 각개약진하듯 따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에, 이제 선진국이 된 지금 각 영역 간 불균형·상호모순·종합적 정합의 부재가 나타나고 있다. 긍정이 부정으로, 대립물로 전화(轉化)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우리가 추격의 여정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이제 '뒤죽박죽 선진국'이 되거나 과거 제국주의적 선진국처럼 '**ugly Korea**'가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생각한다. 서구의 부정적 역사를 직시하면서 긍정의 역사를 쓸 수 있는가 없는가—이것이 광복 100년을 전망하는 우리의 과제다.

내가 재직하던 교육감실에는 신영복 선생이 써 준 서화 한 점이 걸려 있었다. '지남철'이다. "바늘 끝이 언제나 떨고 있다. 여윈 그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우리는 그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한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나침반을 굳게 간직하되 동시에 '불안한 전율'을 유지할 수 있는가. 떨리는 나침반으로 북극성을 향한 방향성과 열정을 놓치지 않으면서, 이 복잡성의 시대를 향해 떨리는 마음으로 응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